

2007. 2. 19 제161호

세계도시동향

세계도시

2007. 2. 19 제161호

목 차

[벤치마킹 사례]

도쿄都 온실가스 저감 대책

도시경영·경제

1. 북미 프로미식축구리그 해외 원정경기 유치 (런던)
2. 조직횡단(組織橫斷) 방식으로 회의 (도쿄)
3. 민간 사회복지시설 제3자 평가 의무화 (도쿄)

디지털도시

4. 사건·사고 실시간 지리정보 확인 서비스 제공 (뉴욕)
5. 전자채용시스템 확대 적용 (영국 더비셔 카운티)

복지·문화

6. 젊은 디지털영화 제작자에게 지원금 지급 (캘리포니아주)
7. '100마일 클럽' 운영 (캘리포니아주 콩코드市)
8. 학생이 직접 자택 리모델링 공사에 참여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市)
9. 현대미술가가 지하철 노선도 디자인 (런던)
10. 새로운 양육비 제도 도입 (독일)
11. 의료비 무료화 중학생까지 확대 (도쿄)

목 차

도시환경

12. 자동차 공해 정도에 따라 주차비 차등 적용 (런던 리치몬드 어폰 템스區)
13. 도심 차량통제 실시 (베를린)
14. 市 중심부 외곽지역 이산화탄소 배출량 급증 (런던)
15. 옥상정원 설치 의무화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市)
16. 음식물쓰레기와 폐유를 이용해 발전(發電) (교토)
17. 전자제품 폐기물 무료로 재활용 (캘리포니아주 사우스 샌프란시스코市)

도시교통

18. 규정속도 초과 여부를 알려주는 장치 설치 (베를린)
19. 강변 자전거도로 동영상 가이드 제공 (뉴욕)
20. 새 지하철 노선 계획 발표 (뉴욕)
21. 시내버스 과속방지 자동장치 설치 의무화 (브라질 상파울루市)
22. 저공해·고에너지효율의 미래형 버스 개발 계획 (런던)
23. ‘자동차 없는 거리’ 조성 (파리)

도시계획·건설·주택

24. 저소득자 주택보조금 제도 시행 (뉴욕)
25. 서민의 내 집 마련 지원 (영국)
26. 공원 주변을 ‘경관지구’로 지정 (도쿄都 에도가와區)

방재·안전

27. 방재정보 다언어화 구축 (도쿄)

[벤치마킹 사례]

도쿄都 온실가스 저감 대책

<주요 내용>

-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하는 ‘지구 온난화 대책 도쿄도청 계획’ 수립 및 시행
 - 도쿄都是 도민 및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의식을 높이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구를 보호하는 도청 계획’(2001년)을 마련하고, 도의 사업 활동에 따른 환경부하의 자발적 저감을 위한 지구 온난화 대책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함.
 - 도쿄都是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증가했기 때문에 2002년 2월부터 ‘지구 온난화 방지! 도쿄 작전’을 전개해 왔고, 2004년 11월에는 ‘도시와 지구 온난화 방지에 관한 기본방침’을 발표했으며, 환경확보조례 개정으로 2005년 4월부터 새로운 ‘지구 온난화 대책 계획서’ 제도를 시행해 온난화 대책을 한층 강화하고 있음.
 - 지구 온난화 대책 도쿄도청 계획은 도청 전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특화계획이며, 「지구 온난화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 1항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실행계획임.
 - 지구 온난화 대책 도쿄도청 계획에 제시된 온실가스 배출량 삭감목표 및 대응내용
 - 공영기업국을 포함한 도청 전체의 사업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9년도까지 2004년도에 비해 10% 삭감을 목표로 함.
 -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대규모 도청 소유 시설을 ‘중점시설1’과 ‘추진시설2’로 구분하고, 차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시행함.
 - 도 청사 등의 에너지 절약 대책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했고, 2003년 지사 부·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에 비해 약 3.9% 삭감돼 삭감목표 2%를 1년 앞당겨 조기 달성한 바 있음.

1) 연료 및 열 사용량이 원유 환산으로 연간 1500kl 이상 시설이나 전기 사용량이 연간 600만kw 이상 시설

2) ‘도 소유 시설의 에너지 소비량 실태조사’ 대상 시설에서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순으로 나열해 누계가 80%를 초과하는 시설 및 각 국(局) 단위별 에너지 사용량이 가장 많은 시설

<표 1> 도쿄都 온실가스 감축 대응방안별 추진전략

대상	추진전략	추진내용	추진부서	CO ₂ 감축효과
대응방안 1: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대규모 도 소유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온난화 대책 계획서 제도에 기초한 대책 실시: 중점시설에서는 '도쿄都 지구온난화 대책 지침'에 기초해 좀더 높은 삭감을 도모하고, 추진시설에서는 동 제도의 임의제출 등 적극적으로 대응 도 소유 시설에 있어 ESCO 사업 추진: 민간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하고, 효과적인 에너지 개선을 추진 전력의 그린 도입 추진: 재생 가능한 에너지 이용 추진을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점시설에 대해서는 ESCO(Energy Service Company) 사업³⁾ 도입이나 에너지소비 설비 개선, 추진시설의 경우 온난화 대책 계획서 임의제출 유도 에너지 검토로 실시가능성을 조사한 후 에너지 효과가 높은 시설부터 우선순위를 부여해 ESCO 사업 적극 추진 대규모 시설에 있어서 전기 구입 시 5% 이상 재생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국 재무국 환경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립병원 ESCO 사업: 2400톤 삭감 문화회관 ESCO 사업: 58톤 삭감
대응방안 2: 공영 기업국 등의 사업 특성에 따라 독자적인 온난화 대책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 계획 2004'를 통해 하수도 사업에서 발생하는 CO₂ 배출량을 2009년도까지 12%(2003년도 대비) 이상 삭감 '수도국 환경계획'을 통해 하수도 사업에서 발생하는 CO₂ 배출량을 2010년까지 6%(1990년도 대비) 이상 삭감(수원림에 의한 흡수효과 포함) 에너지 절약형 차량 도입 추진 소형 특수자동차의 전동차화로 연료 사용량 억제 에너지 절약 신호기로 전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처리수 공정의 전력소비 저감, 하수오니의 고온 소각, 물 재생 센터 기기의 운전시간 단축 및 야간 전력 활용, 하수열·하수오니 소각발열에 의한 열 공급·발전, 소수력 발전, 바이오매스 발전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 활용, 소각로 연료 전환 태양광 등의 재생 가능 에너지에 의한 발전, 인공림 조성, 에너지 절약형 기기 사용, 송배수 전력 절감 지하철, 버스 등 에너지 효율이 높은 공공 교통수단 이용 제고, CNG 버스나 도쿄都 지정 저공해 자동차 적극 도입, 공회전Stop & Start 장치 장착 버스 도입 소형 특수자동차 전동화 LED식 신호기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수도국 수도국 교통국 중앙도매시장 경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수도 분야 온실가스: 16만 4200톤 삭감 에너지 전환: 2만 800톤 삭감 에너지 절약형 차량 도입: 1400톤 삭감 공회전Stop 장치 부착 버스 도입: 290톤 삭감 시장에서 에너지 절약 설비 개수: 1250톤 삭감 소형 특수자동차 전동화: 3500톤 삭감 신호기 LED화: 8900톤 삭감
대응방안 3: 선진모델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 감시 시스템 도입 문화시설에 있어 선형적인 지구 온난화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 감시 시스템 도입 개인이나 환경 비즈니스 사업자와 제휴한 모델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노동국, 교육청, 환경국 생활문화국, 환경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시설 온난화 모델사업 실시: 720톤 삭감
대응방안 4: 에너지 절약 및 재생 가능 에너지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사 등에서 에너지 절약 활동 재생 가능 에너지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사 등에서 에너지 절약 활동, 재화서비스 구입 및 사용의 환경 관리시스템 도입, 건물 건축, 유지 관리 관련 에너지 절약지침 준수 태양광 발전, 풍력수력 발전, 태양열 이용, 하수열·하수소각 폐열 이용, 바이오매스 발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청 전 부서 도청 소유 시설 	
대응방안 5: 삼림 관리 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 수원림 등 삼림 보전 도 소유 시설에서 녹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 수원림 내 약 6000ha 인공림 보존 시가지내 도 소유 시설 녹화, 도립공원이나 도로, 하천 등의 녹화, 옥상녹화 추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국 도청 소유 시설 	

3) ESCO는 Energy Service Company의 약칭으로, 전기와 가스 등 광열비 절약방법을 제안하고 실제 에너지 시설 개선 공사 전후 에너지 절약 효과에 대한 자문에 응하며, 그 결과 확보된 에너지 절약 효과를 보증하는 사업

<해설 및 평가>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쿄도청 계획이 주는 시사점

- 첫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도청 사업별 에너지 이용특성을 실제 파악하고 있는 개별 행정부서가 각 국별 실행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자발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 및 기업 등 민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 유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둘째, 도쿄都 전체 온실가스 감축 대책의 계획적인 대응을 위해 환경국이 국별 실행계획을 점검·조정하거나 평가하도록 하고 에너지 절약 진단방법이나 구체적인 온실가스 삭감대책 관련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도록 함. 또한 환경국에 총괄 조정·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

<서울시정의 현황과 문제점>

○ 서울시 행정부서별 선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실행계획 마련 및 추진 필요

- 현재 서울시는 기후변화 대응 전담팀인 '지구환경팀'을 '맑은서울추진본부'에 신설·운영하고, 주요 시책인 에너지, 자원 및 폐기물, 자동차 오염, 교통, 자연환경 보전 등 5개 분야별 대책을 42개 세부사업으로 나눠 추진하고 있음.
- 도쿄 사례와 같이 향후 행정부서별로 선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실행계획이 마련·추진되고 지구환경팀에서 총괄 평가·조정하게 되면,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시민과 기업의 참여를 유인하고 촉진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서울시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저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이행이 바람직함.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추진되는 제반 사업은 기본적으로 대기오염 배출원 관리와 직접적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향후 서울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감축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마련이 바람직함.

<벤치마킹 시행방안>

○ 서울시 온실가스 관리정보시스템 개발 및 보급

- 서울시 온실가스 관리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기본자료 조회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예측, 추진사업별 효과 평가 등을 할 수 있음.
- 이는 행정부서, 시민 및 기업이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 제품 생산 및 구매 활성화, 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 확대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체계를 실현 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
- 향후 온실가스 관리정보시스템과 대기오염 관리를 통합 연계함.

○ 행정부서별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이행계획 수립 및 정보 공유와 모니터링 강화

- 서울시 행정부서별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한 에너지 절약 이행계획서 작성·추진을 검토하며, 서울시 온난화 대책을 선도하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저감 대책을 수립
- 맑은서울추진본부는 서울시 행정부서별 온실가스 배출 상황이나 삭감 대책의 추진 상황을 파악하고, 각 국·시설 담당자와의 에너지 절약 정보 공유를 통해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함. 한편으로는 공무원의 지구온난화 대책에 관한 의식 계발을 위해 지구 온난화 대책, 에너지 절약 대책 내용 등과 관련된 실무자 연수제도를 추진함.
- 매년 행정부서별 온실가스 저감이나 에너지 대책 추진결과를 모니터링하며, 이를 바탕으로 온난화 대책이나 목표 재검토 등 지속적인 개선 대책을 모색

<벤치마킹 기대효과>

-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서울시 행정부서의 온실가스 감축대책’은 국가와 시민, 기업에 우선해 자치단체의 정책적 이니셔티브를 가질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
- 서울시 중심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지구적·국가적 차원의 기후변화에 대응할 뿐 아니라 도시 미기후의 변화요인을 억제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승수효과를 거둘 수 있음.

/김운수 도시환경부 연구위원(woonkim@sdi.re.kr)

1. 북미 프로미식축구리그 해외 원정경기 유치 (런던)

○ 런던시가 2007년 가을에 열릴 ‘북미 프로미식축구리그’(National Football League)의 첫 번째 해외 원정경기지로 선정됨.

- 켄 리빙스톤 런던시장이 2005년 12월 뉴욕시 소재 미식축구협회를 방문해 경기 유치 홍보에 나서는데 런던시와 런던관광공사가 독일, 캐나다, 멕시코의 도시들과 경쟁을 벌였음. 런던관광공사는 런던시청과 런던개발청, 런던 상공업계 관계자들과 협력해 런던을 세계에서 가장 신나는 도시로 홍보하는 데 주력해 왔음.

- 약 1만여 명의 미국 팬과 영국, 유럽의 미식축구 팬 및 3000만~4000만 명의 북미 지역 TV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효과 등 2012년 올림픽 유치에 이어 도시 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볼 것으로 예상함.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0490)

>>> 전문가 검토의견

- 런던시가 도시마케팅 측면에서 미국의 NFL 해외 원정경기를 유치한 것은 NFL의 흥행성과 런던시의 홍보성이라는 각각의 목적이 조화된 결과라고 보임.

·럭비의 고장인 영국에서 얼마나 많은 미식축구 팬을 경기장으로 끌어들이 수 있고, 미국 팬을 런던으로 유인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임. 하지만 경기관람 목적이 아닌 관광 목적으로 런던을 방문 중인 미국 관광객과 영국 및 인근 국가에 주재하는 미국인이나 미식축구 팬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임.

- 서울시가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 두 가지 전술적인 시사점을 검토해볼 수 있음.

·첫째, NFL이 아시아지역에서도 해외 원정경기를 기획한다면 서울시가 적극 유치해 일본, 중국, 홍콩 등 인근 국가의 미식축구 팬을 서울로 끌어들이.

·둘째, NFL에 국한하지 말고 라틴댄스처럼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국제화된 즐길거리로 서울에서 행사를 열어 관광자원화하면 적지 않은 직·간접적 해외관광객 유치 효과가 예상됨.

/금기용 도시경영부 부연구위원(kykeum@sdi.re.kr)

2. 조직횡단(組織橫斷) 방식으로 회의 (도쿄)

- 새로운 도시전략인 ‘10년 후의 도쿄’ 중 환경부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환경 도시 만들기 전략 합동 회의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
 - 온실가스 효과 삭감을 목표로 하는 ‘Carbon Minus 도시 만들기’와 공립 초·중 학교 교정 잔디화 등 녹화사업인 ‘초록 도시 만들기’를 테마로 추진본부 구성·특정 부서에서 조직되는 기존의 종적행정(縱的行政) 방식이 아닌 각 국(局) 인사를 두루 초빙해 본부를 구성한 것이 특징임.
 - 향후 아동·청년 문제도 조직횡단(組織橫斷) 방식으로 대책회의를 할 방침임.
(마이니치신문, 2007. 1.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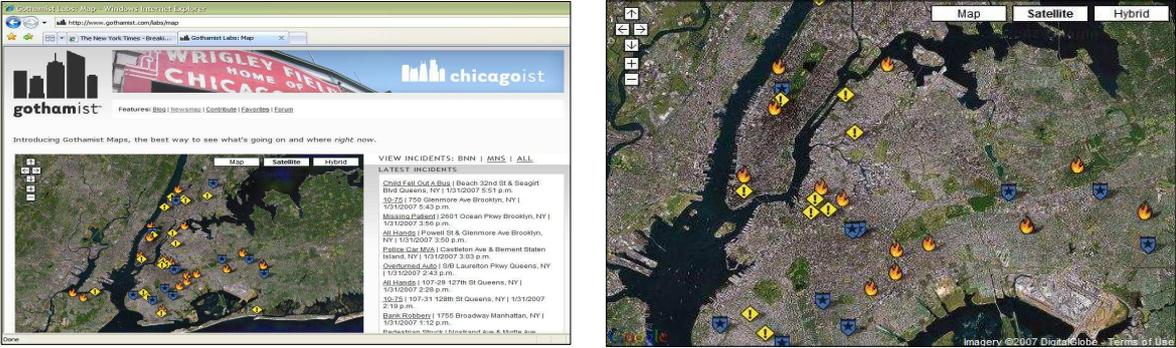
3. 민간 사회복지시설 제3자 평가 의무화 (도쿄)

- 도쿄都 복지보건국은 2008년부터 양로원이나 아동시설 등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제3자 평가와 평가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결정함.
 - 시설의 서비스나 경영상황을 평가·공표함으로써 사업자가 스스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재촉하는 동시에 이용자가 더욱 좋은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
 - 평가항목은 경영상황이나 인원배치, 이용자 만족도 등이고 도가 평가기관으로 인정한 기업이나 NGO법인이 최소 1년에서 최장 3년에 한번씩 평가를 실시함.
 - 2006년 히가시아마토(東大和)시 양로원에서 직원이 이용자에게 성적 폭언을 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제3자 평가가 의무화됨.
 - 이 제도는 일본 내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시설 실태를 공표하는 것이 이용자가 사업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시설을 선택해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마이니치신문, 2007. 1. 23)

디지털도시

4. 사건·사고 실시간 지리정보 확인 서비스 제공 (뉴욕)



- 뉴욕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민간 웹사이트인 ‘고담이스트’(www.gothamist.com)가 뉴욕시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함.
 - 구글 맵(Google Map)과 구글 어스(Google Earth)를 이용해 사건·사고 소식이 접수되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임.
 - 사건·사고 발생지점을 사건 종류에 따라 다르게 표시해 쉽게 구분하도록 하고, 사고 발생지점을 클릭하면 사건·사고명과 사고 발생위치 및 시간 정보가 나타남.
 - 자동차 사고나 방화, 은행강도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건·사고 정보 제공 (gothamist.com/labs/map)

>>> 전문가 검토의견

- 국내에서도 시민에게 거주지역에서 발생한 재난 및 사건·사고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를 많이 찾아 볼 수 있음.
- 소방방재청의 ‘재난뉴스 속보’, 대구광역시의 ‘도로굴착 알림’ 등 텍스트 기반의 다양한 실시간 정보제공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 뉴욕시의 사건·사고 정보 실시간 제공 서비스는 최근 대두되는 GIS와 유비쿼터스 기술 통합의 큰 범주에 포함되는 단순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사건·사고 형태별 관할 행정청간 정보 공유체계 수립을 전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의 경우 GIS 기반의 교통정보센터(TOPIS)의 시민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도로굴착이나 교통사고 등과 같은 추가 정보 제공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장무경 디지털도시부 부연구위원(mkjang@sdi.re.kr)

5. 전자채용시스템 확대 적용 (영국 더비셔 카운티)

- 영국 중북부에 있는 더비셔(Derbyshire) 카운티는 2004년 9월에 처음 도입한 전자채용시스템을 최근 업그레이드하고 파트너십을 맺은 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5개 기초자치단체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임.
 - ‘Abacus e-Media’사가 제공하는 전자채용시스템 사업은 잠재적인 채용대상자를 중심으로 인력풀을 구축해 운영함으로써 비용 대비 효과를 높이고, 지역 주민에게 일관되고 열린 채용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함.
 - 이 시스템은 민간회사가 개발해 더비셔 카운티정부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음.
 -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카운티 광역정부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직 특성에 맞춰 독립적인 전자채용 웹사이트 운영이 가능하게 됨.
 - 채용 공고 제작, 채용심사 관리, 고용계약 양식 등 채용과정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전자행정 솔루션도 제공하며, 업그레이드된 채용관리시스템 도입으로 1주일에 최대 250명의 인력을 추가로 관리할 수 있게 됨.
- (www.publictechnology.net/modules.php?op=modload&name=News&file=article&sid=7449)

한줄 뉴스

- 뉴저지 트랜짓(NJTransit),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학생에게 봄·가을 학기 시작 1주일간 이용할 수 있는 무료승차권 제공
- 파리市, 파리 시장과 시민이 인터넷 채팅으로 시정 주요현안에 대해 질의응답
- 도쿄都 미타카市의 외곽순환도로 지하화 계획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 추진
 - 市 자치기본조례에는 주민투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18세 이상 시민 1/5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규정
- 중국정부, 금융개방 가속화에 대비해 상해市를 국제금융 중심지로 신속하게 조성할 방침임을 재확인
 - 상해市는 영국 런던 로이즈 등 해외 금융기관 유치에 적극적

6. 젊은 디지털영화 제작자에게 지원금 지급 (캘리포니아州)

- 미국 캘리포니아州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젊고 우수한 디지털영화 제작자를 선정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할 계획
 - 디지털영화 제작자가 신선한 시각으로 캘리포니아州의 도시나 지역주민의 일상을 카메라에 담아 응모하면 우수 작품 제작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지원금액은 영화 1편당 3만 달러(약 2800만 원) 정도임.
 - 이 제도는 도시나 지역의 문화를 활성화하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젊은 영화제작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
 - 이 제도가 지역문화와 영화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영화제작자에 대한 지원금뿐 아니라 영화계 종사자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함. 특히 우수한 아이디어는 있으나 제작비가 없는 영화제작자를 위한 기금 활성화가 바람직하다고 평가되고 있음.

(www.calhum.org/downloads/YDFGuidelines.pdf)

7. ‘100마일 클럽’ 운영 (캘리포니아州 콩코드市)

- 캘리포니아州 콩코드市는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더욱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100마일 클럽’을 운영할 계획임.
 - 시민이 ‘100마일 클럽’에 가입해 매일 조금씩 걷거나 뛰어, 운동 거리가 총 100마일(약 160km)이 되면 市에서 기념 티셔츠를 줌.

- 걷거나 뛰는 것은 어디서든 공짜로 할 수 있다는 데서 출발한 이 클럽은 시민이 자연스레 일상적인 운동에 동참함으로써 비만을 줄이고 건강을 유지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것임. 나아가 하나의 도시 문화로 정착할 잠재력도 있음.
- 하지만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가능성도 있고 목표 거리인 160km를 달성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클럽에 동참하도록 할 유인도 약한 상황임.
- 이 클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거리와 중거리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정기적인 걷기 대회를 여는 것도 대안이 됨.

(www.ci.concord.ca.us/100mileclub/index.htm)

8. 학생이 직접 자택 리모델링 공사에 참여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市)

-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市는 주거환경 향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청년 참여 프로그램(ProJovem)에 참여 중인 건축공학 전문가 과정 학생을 자신의 집 리모델링 공사에 직접 참여시켜 실무 학습 및 주택 리모델링 혜택을 제공함.
- 22만 3000헤알(약 9000만 원)을 투자해 2007년 1월까지 총 200가구를 페인트칠과 바닥자재 교체, 벽·담 건설 공사로 리모델링함.
- 市는 이외에도 사회프로젝트를 통해 산토스 두몬트 공항 인근 빈민층 300가구에 배움의 기회, 전문가 과정, 취업시장 진출을 위한 과정을 제공함.
- 이발, 미용, 쓰레기 재활용, 수공예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배부하고 사회교육가 6명을 배치해 빈민층이 이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함.

(www.rio.rj.gov.br)

9. 현대미술가가 지하철 노선도 디자인 (런던)

- 2007년도 런던 지하철 노선도를 현대미술가인 Liam Gillick이 ‘The Day Before(You Know What They'll Call It? They'll Call it the Tube.)’라는 제목으로 디자인해 배포함.
 - 런던에 지하철이 처음 운행되기 전날인 1863년 1월 9일 등을 상징화해 12개 노선을 12색으로 디자인함.
 - Gillick은 2002년 영국 현대미술상인 터너상(Turner Prize) 수상후보였고, 영국 근대미술관인 Tate Britain 등에 작품이 전시돼 있는 유명작가임. 2003년에는 런던 지하철 그레이트 포트랜드 스트리트역의 포스터를 제작했음.
 - 런던지하철공사는 지하철과 예술 문화를 접목하기 위해 예술진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새로 제작한 지하철 노선도 약 150만 부를 시민과 관광객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음.

(www.tfl.gov.uk/tfl/press-centre/metro/article.asp?id=1415)

10. 새로운 양육비 제도 도입 (독일)

- 유럽 내 최저 출산율로 고심하고 있는 독일이 출산 장려책으로 2007년 1월 1일 부터 새로운 양육비 제도를 실시
 - 기존에는 출산 후 2년간 매달 300유로(약 36만원)를 양육비로 지급했으나 새 제도에서는 지급대상자의 현재 월급을 감안해 책정함.
 - 양육을 맡는 쪽(부모 중 한사람만)의 현재 월급의 67%를 출산 후 14개월까지 지급함. 최고 1800유로(약 216만 원)까지 지급
 - 편부모, 저임금 수령자, 실업수당 수령자에게는 매달 300유로(약 36만 원)를 추가로 지급
 - 2006년 12월 26일과 2007년 1월 6일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기존 제도와 새 제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음.

(Berliner Morgenpost, 2006. 12. 27)

11. 의료비 무료화 중학생까지 확대 (도쿄)

- 도쿄도가 저출산 대책으로 2007년 10월부터 중학생까지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자 이에 호응하는 區가 늘고 있음.
- 자녀 의료비 무료화 사업은 구민 요청이 매우 높은 사업이며, 이미 중학생까지 의료비 무료화 시책을 펼치고 있는 곳으로는 4개 구가 있음.
- 네리마(練馬)구의 초·중학생 인원은 약 5만 3000명으로 연간 약 14억 2500만 엔(약 11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도쿄도에서 받는 지원비는 1억 9000만 엔(약 15억 2000만 원)임.
- 도시마(豊島)구는 당초 초등학생까지 의료비 무료화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중학생까지 확대하기로 변경함.
- 이타바시(板橋)구는 초등학생까지만 의료비 무료화 혜택을 주되 의료비 무료화 적용 대상 선정기준에서 소득 제한을 철폐

(東京新聞, 2007. 1. 5)

한줄 뉴스

<영국>

- 플리머스市, 도시의 역사와 시민의 일상을 담은 사진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해 정체성과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시민 참여를 촉진
- 영국정부,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교토의정서 기준을 달성했다고 발표
 -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자동차와 에너지 생산 산업에서 발생하는 양이 증가해 기준 미달
- 환경보존과 기후변화 예방을 위해 부동산 매물에 에너지효율 증서 부착 정책 실시
 - 구매자가 에너지효율을 비교하고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
- 2007년 1월 영국 건축환경협회와 문화재청이 고층건물에 대한 도시계획 개정지침서 발표
 - 개정지침서에는 고층건물 건설가능 지역과 높은 수준의 디자인 필요성 제시

도 시 환 경

12. 자동차 공해 정도에 따라 주차비 차등 적용 (런던 리치몬드 어폰 템스區)

○ 런던市 리치몬드 어폰 템스區는 2007년 1월 환경보존을 위해 자동차 공해 정도에 따라 주차비를 차등 적용하는 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3개월 후 실시할 예정

-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 연간 주차비를 300파운드(약 57만 원) 인상함. 전기자동차의 경우 주차비는 무료고, 2대 이상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주차비를 50% 인상함.

- 런던시장은 이 제도를 지지하며 다른 자치구도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함.

(Planning, 2007. 1. 31)

>>> 전문가 검토의견

- 친환경자동차 운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는 세계적인 추세임.

·도시 시민의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 물질이 자동차에서 가장 많이 배출됨에 따라 최근에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도입되고 있음.

- 서울시도 현재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다양한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저공해자동차 보급 및 운행 확대를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료와 혼잡통행료 감면 등을 추진하고 있음.

- 향후에는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거주자 주차우선권 부여나 각종 세금 경감 등과 같은 우대조치를 확대하고, 오염물질 과다배출 노후자동차에 대해서는 각종 부과금을 가중하는 등 차등적인 자동차 환경관리가 필요함.

/김운수 도시환경부 연구위원(woonkim@sdi.re.kr)

13. 도심 차량통제 실시 (베를린)

○ 2008년부터 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베를린 순환선(S-Bahn-Rings) 내 88km² 지역을 ‘환경구역’(Umweltzone)으로 지정하고 베를린 도심을 통과하는 차량통제 실시

-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만 환경구역을 통과할 수 있음.

·녹색: 규정에 맞는 촉매변환 장치를 장착한 휘발유 차량(1988년 이후 생산 차량)과 배출규정 Euro IV를 충족하거나 미세먼지 필터를 장착한 디젤 차량

·노란색: 배출규정 Euro III을 충족하는 디젤 차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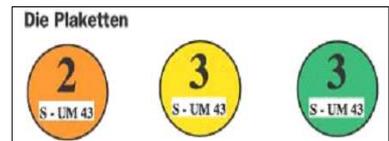
·빨간색: 배출규정 Euro II를 충족하는 디젤 차량

·스티커 가격은 10유로(약 1만 2000원)며 한번 구매할 스티커는 차량이 폐기될 때까지 유효함.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채 환경구역을 통과할

경우 벌금 40유로(약 4만 8000원)와 벌점 1점이 부과됨.

·2010년부터는 규정을 강화해 녹색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만 통과 가능



차량에 부착하는 스티커

- 현재 예외차량에 대해 논의 중이며 장애인 차량은 예외로 인정할 예정

(www.tagesspiegel.de/berlin/archiv/09.01.2007/3010180.asp)

>>> 전문가 검토의견

- 온실가스 감축과 교통대책은 불가분의 관계여서 공편익(Co-benefit)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강조되고 있음.

·서울에서 교통부문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요인이면서 교통혼잡 유발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교통대책은 두 가지 편익을 동시에 낳을 수 있음.

- 서울시도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CNG 버스 보급 등으로 온실가스 저감 및 교통소통 원활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맑은서울추진본부에 기후변화팀과 교통수요관리팀을 배치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나, 향후 더욱 통합적인 관리 접근이 필요함.

·일차적으로 교통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및 교통소통, 에너지 절약 등의 통합 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수단을 정리한 후, 적용에 따른 효과평가를 수행하는 ‘목표설정과 이행 가능성 평가’가 필요할 것임.

/김운수 도시환경부 연구위원(woonkim@sdi.re.kr)

14. 市 중심부 외곽지역 이산화탄소 배출량 급증 (런던)

- ‘Transport 2000’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런던 중심부 외곽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교통량과 이로 인해 증가된 이산화탄소 양을 감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함.
- 지난 12년간 런던시내 중심부의 교통량은 감소했으나 런던 중심부 외곽지역의 교통량은 약 15% 증가함. 앞으로 12년간 외곽지역의 교통량이 약 1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도 함께 증가할 것임.
- ‘Transport 2000’은 런던 중심부 외곽지역의 대중교통 이용률은 13%에 그치고 자동차 교통량은 87%에 달하므로 영국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60% 감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외곽지역의 교통량을 17% 정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www.rudi.net/news/12791)

>>> 전문가 검토의견

- 현행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한 ‘환경지역’이나 ‘저배출지역’의 지정·운영은 선진도시에서 이미 시행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정책수단임.
- 선진 환경도시인 런던, 베를린, 스톡홀름, 도쿄 등에서 오염물질 과다배출 노후경유자동차 운행제한을 위한 환경지역을 지정·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 중임.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저감대책으로서 효과가 있음.
- 서울시는 현재 2009년 환경지역 지정·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관련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임.
- 다만 서울시 환경지역 지정은 근본적으로 차량운행을 전제로 하되 오염물질 과다배출 노후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의무이행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므로 시민에게 적절하게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정책추진의 관건이 될 것임.

/김운수 도시환경부 연구위원(woonkim@sdi.re.kr)

15. 옥상정원 설치 의무화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市)

-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市는 2007년 4월부터 공기정화, 온실가스 배출 감소, 냉·난방비 절감 등의 효과가 있는 옥상정원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결정
 - 패서디나市 아트센터를 비롯해 로스앤젤레스市 주변 도시 건물에서 볼 수 있는 옥상정원은 최근 샌타모니카市 공공주차장 건물에도 설치돼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 옥상정원을 설치할 경우 도심 한가운데서 공원과 같은 정취를 느낄 수 있고, 지역 특유의 곤충이나 조류의 생태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됨.
 - 최근 지붕방수 설비 및 시공기술 발전으로 옥상정원 수명이 늘어나 20여 년까지 지속됨.
(www.latimes.com/news/science/environment/la-me-roofs28dec28,1,4264732.story)

16. 음식물쓰레기와 폐유를 이용해 발전(發電) (교토)

- 일본 교토市는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와 폐유를 이용해 수소가스를 만들어 발전(發電)하는 실험에 일본 최초로 성공했다고 발표함.
 - 먼저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기계로 분쇄하고 풍력으로 비중이 가벼운 플라스틱을 날려 보내 음식물쓰레기를 가려냄. 폐유에 화학반응을 일으켜 불요액(不要液: 불필요한 용액)을 분리해 낸 후, 불요액에 음식물쓰레기와 발효균을 혼합해 생성된 메탄가스를 수소가스로 변환함.
 - 교토대에서 개발한 이 장치는 수소가스 생성 시 배출됐던 이산화탄소를 억제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市는 계속 연구를 진행시켜 2013년부터는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이용해 발전(發電)할 방침임.

(요미우리신문, 2007. 1. 30)

17. 전자제품 폐기물 무료로 재활용 (캘리포니아주 사우스 샌프란시스코市)

○ 캘리포니아주 사우스 샌프란시스코市는 환경보호를 위해 2007년 2월 9일 전자제품 폐기물을 무료로 재활용하는 사업(Free e-Waste Recycling)을 실시하기로 함.

- 무료로 재활용하는 전자제품은 컴퓨터 관련 기기, 복사기, 프린터 토너, 전기선, 휴대전화, 전화 관련 제품, 오디오 제품 등임. 자동차 건전지, 전자레인지 등은 제외함.

- 이 사업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전자제품 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됨. 市는 전자제품의 재활용을 통해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라는 두 가지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나 많은 시민이 이 사업에 참여하기에는 유인이 약한 상황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고 참여 시민에게 다각적인 보상이 필요함.

·자원 재활용 사업은 기술과 시대 상황의 변화에 맞도록 시행할 필요가 있음. 정책 유인에 대한 시민 반응을 살펴보고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www.ci.ssf.ca.us/civica/inc/displayblobpdf2.asp?BlobID=9679)

한줄 뉴스

- 브라질 벨로 오리존테市, 디지털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으로 인터넷 시민공청회가 활성화되고 시민의 행정 참여가 활발

·상가의 일요일 영업 허가 건으로 인터넷 시민공청회 개최 예정

<브라질 쿠리치바市>

- 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고영양 식사를 제공하는 대중식당을 2007년 5월에 개장

-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과학기술 프로그램을 시행해 기업 지원

·경제 활성화를 통한 市정부 세입 증가와 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

도 시 교 통

18. 규정속도 초과 여부를 알려주는 장치 설치 (베를린)

- 학교 근처 등하굣길과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곳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 규정속도를 초과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초과 여부를 알려주는 장치인 'Dialog-Displays'를 베를린 전역에 설치할 예정
 - 베를린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약 1/3이 규정속도를 어겨서 발생함.
 - 2006년 상반기에 적발된 규정속도 초과건수는 약 39만 건이었고, 이 중 25만 명의 운전자가 20km/h를 초과했음.
 - 장애인학교 근처에 처음 설치했으며, 2007년 4월 말까지 40군데에 설치할 예정임.
 - Tempo-30-zone 및 학교, 병원 등 속도를 줄여야 하는 곳에 주로 설치할 예정인데, 2005년도에 Tempo-30-zone에서 발생한 규정속도 초과율이 17%로 베를린 전 지역에서 발생한 규정속도 초과율 약 9%보다 훨씬 높기 때문임.
 - 규정속도로 운전하는 운전자에게는 “고맙습니다”라는 표시를, 규정속도를 어길 경우 운전자에게 “천천히”라는 표시를 보여줌.



(좌) 푸른색으로 “고맙습니다”(Danke), (우) 붉은색으로 “천천히”(Langsam)를 표시

- 장치 가격은 한 대당 약 5000유로(약 600만 원)이고, 교통량도 측정할 수 있으며 측정된 교통량은 자동 저장됨.

(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0701/nachricht2541.html)

>>> 전문가 검토의견

- 베를린에서 운영중인 Dialog-Displays 장치는 현재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도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 중인 DFS(Driver Feedback Sign)의 일종으로 보임.
 - DFS는 보통 레이저를 이용해 접근차량의 속도를 측정하고 주행속도를 Display Board에 표출하는 장치로서, 주로 사고빈발지역이나 공사 구간에서 운전자에게 접근속도를 알려줘 과속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 Dialog-Displays 장치는 접근속도 대신 적합 여부를 단순히 표출해 운전자에게 구어적인 표현으로 자신의 운전상황을 알려줌으로써 좀더 명확한 의사전달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됨.
- 간선도로나 고속도로와 같이 고속주행도로 구간보다는 스쿨존에 설치해 운전자에게 어린이 보호를 강조함으로써 통학길 교통사고를 현저히 줄일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판단됨.
-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장치를 개발·보급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기를 기대함.

/김원호 도시교통부 부연구위원(wonor@sdi.re.kr)

19. 강변 자전거도로 동영상 가이드 제공 (뉴욕)

- 뉴욕시 도시계획과 산하 맨해튼 워터프런트 그린웨이(Manhattan Waterfront Greenway) 사무국은 자체 웹사이트에 자전거도로 지도 및 향후 발전계획 등을 게시하고, 자전거도로 위를 운행하면서 촬영한 동영상을 구간마다 링크해 놓아 시민의 자전거도로 활용을 도모하고 있음.
-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활용을 높이고 시민의 레저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함.
- 웹사이트에 자전거도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간이 없다는 단점이 있음.

(www.nyc.gov/html/dcp/html/mwg/virtual_ride_home.shtml)

20. 새 지하철 노선 계획 발표 (뉴욕)

- 뉴욕 맨해튼 이스트사이드에 월스트리트와 할렘가를 연결하는 새 지하철 노선인 'T전철'이 들어설 예정임.
-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2nd 애비뉴의 125스트리트와 하노버스퀘어를 잇는 지하철 건설 공사를 2007년 3월 초부터 시작한다고 2007년 1월 25일에 발표함. MTA의 한 관계자는 “이번 공사는 구간별로 이뤄지며 1차 구간은 92스트리트와 96스트리트 사이가 될 것”이라고 밝힘.
- 우선 가스관과 수도, 전화 등 공공시설물 재배치 공사를 하고 시설물 재배치가 끝나면 1차 구간 지하에 21m 깊이로 구멍을 뚫어 천공기를 투입해 터널 공사를 시작함. 터널은 총 3개 철로로 만들어질 예정임.

(미주 중앙일보, 2007. 1. 15)

21. 시내버스 과속방지 자동장치 설치 의무화 (브라질 상파울루市)

- 브라질 상파울루市는 2007년 1월 6일부터 120일 내에 시내버스 운행 속도를 60km/h로 제한하고 과속방지 자동장치와 문이 열린 경우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 설치를 의무화함.
 -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과속을 시도하면 이를 자동으로 막아 제한속도를 유지하게 됨.
- 최근 시내버스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로 다양한 대책이 도입되고 있음.
- 2006년 12월에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더욱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 GPS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

(www.estado.com.br/editorias/2007/01/06/cid-1.93.3.20070106.13.1.xml)

22. 저공해·고에너지효율의 미래형 버스 개발 계획 (런던)

- 런던 과학박물관에 전시된 저공해·고에너지효율의 미래형 무인버스가 10년 내에 상용화될 예정
 - ‘Capoco Design’사와 왕립예술학교(Royal College of Art)가 공동 설계한 미래형 버스 pod는 저공해·고에너지효율 외에도, 자석이 내장된 도로표지판을 감지하는 내비게이션 기능이 있는 첨단 장비임.
 - 버스 내에는 위성통신 내비게이션, 지능형 운행시스템 등도 갖춰 최단·최고 효율의 노선으로 운행하며, 사고 등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함.
 - 무인버스는 승객이 휴대폰으로 승·하차 지점을 지정할 수 있고 최대 24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다른 버스와 연결해 열차형태로도 운행이 가능함.
 - 전기 및 바이오 연료로 작동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으로서 운전자 없이 무인으로 운행해 50%의 비용절감 효과 기대
 - 2008년 시험 무인버스를 제작해 히드로공항 인근에서 시범운행할 계획임. 시범운행 결과가 성공적이면 10년 이내에 도입할 예정으로, 2012년 런던올림픽 개최에 맞춰 제작발표회를 가질 계획임.



런던 과학박물관에 전시된 미래형 무인버스

(news.bbc.co.uk/1/hi/england/london/6271613.stm)

23. ‘자동차 없는 거리’ 조성 (파리)

- 대기질 개선을 위해 파리시장과 교통환경담당관 주도로 파리시내에 ‘자동차 없는 거리’를 조성할 계획
 - 현재 자동차가 파리시내와 파리 교외 전체 교통량의 22%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면 2013년에는 20%, 2020년에는 17%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
 - 파리시내의 공기도 2030년에는 50%, 2020년에는 100% 이상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파리시민에게 앙케트 조사를 실시한 뒤에 투표로 결정할 계획
 - 조지 폰피두 거리 제방길을 폐쇄하고 교외대로 교통체계를 재구성해 파리시 중심가에 자동차 진입을 제한함.
 - 샤펠, 폰 까르디네, 벅시 지역에 새로운 RER(파리 교외선)역을 만들고 푸흐슈 지역에 13선 지하철을 연결함.
 - 새로운 유동 버스노선을 만들고 센강에서 정기선을 운항하고 파리 교외 차로는 택시와 응급차량, 청소차 등에 한정함.
 - 오염물질 방출 차량에는 특정 지역이나 주차구역 등의 출입을 금지함.

(fabricerousseau15.hautetfort.com/archive/2007/01/15/non-au-nouveau-plan-anti-voiture-de-delanoe.html#more)

한줄 뉴스

<런던>

- 역사유적인 ‘즉결재판소’를 개인이 매입해 호텔로 재개발 추진
- 민간부문에서 유적지 건물을 매입해 개발하고 공공기관은 관리·감독하는 영국식 민·관 역할분담 사례

<베를린>

- 경찰청, 불꽃놀이용 화약류 보관과 판매에 대한 단속 강화
- 소형 화약류는 18세 이상 성인에게만 판매 가능
- 인구학적 변동과 의학 발달로 부양대상자 수가 1999년 8만 870명에서 2005년 9만 6100명으로 1만 5000여 명 증가

24. 저소득자 주택보조금 제도 시행 (뉴욕)

○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2007년 1월 29일, 12년 만에 처음으로 저소득자 주택보조금 제도인 '섹션 8 바우처'(SECTION 8 VOUCHER) 제도를 실시해 2만 2000가구에 '적정가격 주택'(Affordable housing)을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

- 소득이 2만 4000달러(약 2200만 원) 이하이거나 4인 가족 기준 소득이 3만 5000달러(약 33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가정이 집을 구할 때 집주인이 바우처(현금 대용 인환권)를 받으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고, 시세와 실제 임대료 차액은 市가 대신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제도임.

- 노숙자로 내몰릴 수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바우처 3000장을 우선 배부할 예정임. 바우처가 있는 가정은 연방정부에서 정한 임대료 기준에 따라 소득의 30%만 임대료로 내면 됨.

·뉴욕의 경우 평균적으로 내는 집세가 소득의 약 50%임.

- 뉴욕시는 2013년까지 저소득 및 중간소득 계층을 위해 16만 5000여 개의 적정가격 주택을 보급할 계획임.

·가정폭력 피해자, 양자 양육 후 재결합한 가정, 주택보조금이 급히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 제공할 예정이며 바우처 200장은 장기 노숙자에게 제공할 예정임.

- 뉴욕시 주택사무국(NYCHA: 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007년 2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접수받을 예정

- 저소득자를 위한 뉴욕시의 주택보조금 지급 재개는 긍정적이지만 대상자 선정 시 탈락한 시민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

(www.nyc.gov/portal/site/nycgov/menuitem.c0935b9a57bb4ef3daf2f1c701c789a0/index.jsp?pageID=mayor_press_release&catID=1194&doc_name=http%3A%2F%2Fwww.nyc.gov%2Fhtml%2Fom%2Fhtml%2F2007a%2Fpr028-07.html&cc=unused1978&rc=1194&ndi=1)

>>> 전문가 검토의견

- 주택 바우처 제도는 미국과 영국 등에서 저소득층 주택자금 보조를 위해 시행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연방정부 재원을 이용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함.
- 서울시의 경우 현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전세 공공주택 공급, 전세자금 지원 등을 주요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미국의 주택 바우처 제도 도입 타당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 건설교통부도 2007년 1월 31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에서 장기임대주택 추가 공급, 금리우대 모기지론 공급 재개, 임차자금 보증한도 확대 등을 비롯해 저소득층 전·월세 자금 일부를 쿠폰 형식으로 보조해 주는 주택 바우처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 서울시 차원에서 주택 바우처 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금조성, 임대시장 조건, 저소득층 자격요건, 관리행정 등 수많은 사안을 사전에 검토해야 함. 방대한 기금 마련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영국처럼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신상영 디지털도시부 연구위원(syshin@sdi.re.kr)

25. 서민의 내 집 마련 지원 (영국)

- 영국정부는 무주택 서민이 처음 집을 마련할 때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주택가격의 절반을 정부가 보조하고 서민은 주택가격의 반만 모기지론으로 부담하는 '내 집 마련 지원 프로그램'(First Time Buyer's Initiative)을 실시할 예정
- 현재 시범지역으로 18개 개발지에 있는 700호 주택에 적용할 예정이며 약 1만 5000명의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
- 간호사, 교사, 경찰관에게 공급량의 50% 우선 제공
- 주택 가격을 정부와 서민이 함께 분담하고 공동소유를 통해 재정적 부담을 완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www.communities.gov.uk/index.asp?id=1002882&PressNoticeID=2347)

26. 공원 주변을 '경관지구'로 지정 (도쿄都 에도가와區)

- 도쿄都 에도가와(江戸川)구는 도시경관을 보호해 후세에 남겨주기 위해 이치노에친스이 공원 주변을 '경관지구'로 지정
 - 공원 양쪽 20m 범위 내 약 18만㎡에 있는 신축 건물은 높이 10m 이내로 제한하며, 화려한 색깔을 사용할 수 없고 지붕형태도 규제함.
 - 이러한 규제를 도시의 주택지에 적용하는 것은 일본 내에서 최초임.
(東京新聞 인터넷판, 2007. 1. 8)

방재 · 안전

27. 방재정보 다언어화 구축 (도쿄)

- 도쿄都가 직하형 지진 등 대규모 재해에 대비해 언어와 문화 차이로 재해 약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을 돕고자 방재 정보의 다언어화 구축에 착수함.
 - 2004년에 니이가타(新潟)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대응 방법이 과제로 부상함.
 - 외국인의 경우 재해 시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고 언어 장벽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 도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모국어 미디어를 통해 방재정보와 생활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함.
 - 통역이 가능한 어학 자원봉사자도 확충할 예정임.
 - 일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등 4개 국어로 된 방재 DVD도 제작해 제공할 계획임.
(東京新聞 인터넷판, 2007. 1. 16)